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

허태희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신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처럼 작년에 어렵게 성사된 북한과의 개성공단합의, 이어서 최근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던 새 정부의 정책시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한때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장성택사건 이후의 북한의 내부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똑심외교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전망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2.14.) 발표자료

목 차

1. 서론
2. 동북아 안보상황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 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동북아에 미치는 파장
 - 나. 미중 해양전략의 충돌과 해상경쟁의 심화
 - 다. 미국의 세일석유 개발파장과 에너지 해상수송안보
3. 주변 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핵문제
 -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 나. 일본의 우경화와 대한반도 정책
 - 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한반도
 - 라.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대한반도 정책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정책 방향
 - 가.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
 - 나.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1. 서론

- 2013년 2월 25일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감. 신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처럼 작년에 어렵게 성사된 북한과의 개성공단합의에 이어서 최근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음.
- 지난 MB 정부 5년간 고착화되었던 남북대립과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인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던 새 정부의 정책시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한때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그리고 장성택사건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북한의 내부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독심외교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전망하면서 몇 가지 대북정책 대안을 모색하려 함.

2. 동북아 안보상황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 아시아 전 지역에 미국의 중국포위전략 대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거부)전략의 충돌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일 간 센카쿠분쟁, 한-일 간 독도분쟁, 중국과 동남아국가 간의 남사군도분쟁 등으로 이 지역이 다시 불안정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음.
- 미-중관계가 단순하게 갈등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호혜적인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양측 간에 전면전의 발생이나 적대적 대립구도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아태지역에서의 미·중 간 해상경쟁이 지역국가의 해양영토분쟁에 연계되면 매우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살펴봄.

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이 동북아에 미치는 파장

- 2012년 초 미국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정부 재정적자가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군사비감축이 초래할 과도한 군사력 약화를 상쇄하기 위하여 군사력약화 최소화 및 동맹국의 최대 활용 그리고 효율적 국방체계 발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아시아 중심전략”을 발표하였음.
- 계속되고 있는 미국 경제쇠퇴와 경기침체, 정부 재정적자 증대, 상대적 인 중국의 G2 부상과 군사적 도전, 지난 10년간의 대테러전쟁의 종결,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불안정상황 등을 고려한 미국 신 방위 전략의 핵심 요지는 향후 10년간 대략 1조 달러에 가까운 국방예산의 감축에 따라 ‘원 플러스(One Plus)전략’을 수립하여 ‘2개 전장에서 동시 승리’ 대신에 ‘1개 전장승리와 1개 전장억제’를 추구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상군 병력과 핵무기를 감축하겠다는 것임.¹⁾
- 미국의 신 방위전략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아시아 중심으로 선회임.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대테러전쟁의 성공으로 테러리즘의 위협이 감소된 상황에서 이제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아태지역으로 전략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임.
- 미국의 사활적 안보이익의 지역이었던 중동에서 아태지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지역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에 따른 미국의 국익확보와 대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²⁾

나. 미중 해양전략의 충돌과 해상경쟁의 심화

-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불안정요인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 미-중 해양 전략의 충돌과 해상경쟁의 심화임. 최근 미국은 자신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대테러전쟁에 전면해 있는 동안 중국이 군사력의 증강과 함께 장거리 투사능력의 확대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이 향후에도 경제력 증대로 인하여 더욱 더 공세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해양전략이 1980년대 중반까지 연안방어전략이었으나 근해 적극방어전략으로 전환해왔으며 이후 원해 적극방어전략으로 나가려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 중국이 태평양 진출과 함께 인도양 진출을 시작하여, 인도양 연안의 국가를 공략하는 소위 ‘진주목걸이전략 (String of Pearls)’을 추진하면서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항, 스리랑카의 함반도타 항, 미얀마의 코코군도, 태국의 송클라 항과 캄보디아의 쿠크섬을 연결함으로써 사실상 인도를 완전히 포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임.³⁾

미국의 “아시아 중심전략”은 사활적 안보이익의 지역이었던 중동에서 아태지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지역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에 따른 미국의 국익확보와 대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미·중 해상경쟁이**동아시아****해양영토분쟁과****연계되면서****역내경제협력은 물론****지역안보와 안정을****크게 손상시킬 수****있다는 것임**

- 중국의 근해방어전략이나 진주목걸이전략이 사실 미국에게는 “반접근 및 접근거부전략(A2/AD)”인 것으로 비추어져 이렇게 명명하고 대응하기 시작하였는데,⁴⁾ 미국은 대중국 A2/AD전략의 대응전략으로 “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전략”으로 맞서고 있으며,⁵⁾ 이러한 JOAC(합동작전접근)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퀴축전략(Hub and Spoke)을 통하여 사전에 JOAC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는바(동맹국과 전략적 협력국가들의 활용 극대화전략), 여기에서 허브는 전통적 동맹국가군을 의미하며 스포크란 동맹 이외의 우호국가군을 의미함.⁶⁾
- 미국은 허브(바퀴축)에 해당하는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과 전통적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하면서 동시에 스포크(바퀴살)에 해당되는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음.⁷⁾
- 중국의 A2/AD 능력이 합동군사작전에 도전이 된다는 것을 인지한 미국방부는 공군과 해군으로 하여금 그 하부작전개념인 “공해전투”개념을 개발하도록 하였는데 이 공해전투의 의도는 전투사령관으로 하여금 적이 “고성능 반접근 지역거부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육해공·우주 및 사이버 병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⁸⁾ 이 공해전투개념은 지휘통제와 통신에 있어서 강력하게 네트워크화 되고 통합된 해·공군이 합동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동원해 적의 중심부를 직접 강타하겠다는 개념임.⁹⁾

- 미·중 해상경쟁이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연계되면서 역내경제협력은 물론 지역안보와 안정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이 지역에서의 미중 간 해상경쟁은 이미 격화되고 있는 역내국가 간 해양영토분쟁을 더 심화시키고 고조시키면서 심각한 파국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¹⁰⁾ 2012년 7월 일본과 중국 간에 벌어진 센카쿠열도분쟁(중국명: 댜오위다오)이 지금은 다소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당시의 상황은 매우 심각할 정도였음.
 - 최근에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자국의 핵항모를 이 지역에 보내어 해상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일본도 중국의 군사력 시위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함.
 - 러시아와 일본 간의 해묵은 북방도서 영유권문제가 있으며 남중국해의 서사군도·남사군도 분쟁도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이회관계 및 역사적/민족주의적 감정까지 얽혀 있어 분쟁이 크게 악화될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해양영토분쟁이 단지 영토문제가 아닌 민족주의적 감정이 개입되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음.

다. 미국의 셰일석유 개발파장과 에너지 해상수송안보

- 동북아 긴장요인을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해상전략충돌의 배경에는 최근 세계 에너지분야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셰일석유의 시추개발문제가 있음.¹¹⁾
- 세계 에너지분야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비전통적 원유”로 불리는 셰일석유(Shale Oil)의 시추 및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5~6년 뒤에는 미국이 세계 최대석유수입국에서 세계 최대산유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¹²⁾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석유자급자립 및 수출국지위 획득이 당연히 세계 에너지 시장판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런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서 군사전략적으로 더욱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¹³⁾
- 셰일석유의 매장량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그러나 셰일석유의 개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물부족과 기술력의 한계’로 미국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석유자급으로 인하여 미국의 소비가 줄어든 중동산 석유의 대부분을 중국과 인도가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큼.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해상송유선(Sealane)을 보호해야 할 해군전력의 강화 및 적극적인 에너지수송안보의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임.
- 문제는 중국의 이런 전략적 고민과 해상전력 강화에 대하여 미국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일본, 태국, 한국 등과 같은 친미 계통 국가들과의 해상안보이익 공유를 통해 중국을 더 압박하고 제어하려고 하고 있어서 양국 간의 해상전략 대립과 역내 분쟁발생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문제는 중국의 이런 전략적 고민과 해상전력 강화에 대하여 미국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일본, 태국, 한국 등과 같은 친미 계통 국가들과의 해상안보이익 공유를 통해 중국을 더 압박하고 제어하려고 하고 있어서 양국 간의 해상전략 대립과 역내 분쟁발생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3. 주변 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핵문제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 2012년 5월 재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협력하면서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를 견제하는 한편 시베리아·극동의 풍부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수출하여 경제 수익을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기하며 동북아에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신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는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극동의 천연가스를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증진하려 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일본 자민당**아베 정부는****우경화 정책을****채택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두고****중국과의 정면 대립을****불사하고 있으며****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와 3차 핵실험을****빌미로 삼아****자위대를 무장하고****집단적 자위권 행사의****범주를 더 확장해****나가려 함**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러시아는 국제규범을 어긴 행위로 비난하고 안보리 제재에도 동참하였지만,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긴장과 대립 상황이 발생해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훼손되고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고 있음.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하지만 개별적인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히고 대북제재는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 분야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북·러관계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말 한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면서 2개의 협정과 15개의 MOU를 체결하고 향후에도 양국이 “유라시아 단일경제권 구축”에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음.¹⁴⁾

나. 일본의 우경화와 대한반도 정책

- 일본 자민당 아베 정부는 우경화 정책을 채택하여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두고 중국과의 정면 대립을 불사하고 있으며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빌미로 삼아 자위대를 재무장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주를 더 확장해 나가려 함.
 -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범위가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뿐 아니라 한국 및 호주에 대한 공격에까지도 일본의 반격권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적의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용 순항미사일 보유와 항모급 헬기호위함(DDH)을 진수하는 등 해상전력을 증강함.
 - 2014년도 국방예산(56조원)을 2.9% 증액키로 하면서 일본 정부는 수륙양용차와 F35 전투기와 같은 신규무기구입에 예산 27%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NSC와 내각정보국을 신설할 방침도 밝힘. 특히 아베 정권은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확보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최근 개헌이 힘들어 지자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우회적 접근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내용이 대폭 확대되면서 아베 1차집권(2006~2007) 시 제시되었던 4개의 유형(일본자위함과 공동훈련 중인 미국함선의 공격 시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요격, 유엔평화유지군(PKO) 참가 시 타국부대 긴급경호, PKO 참가국 후방 지원 등)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지원활동’이라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음.¹⁵⁾ 만약에 일본이 미국의

목시적 지원하에 집단적 자위권내용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지원활동을 포함시키면 이러한 사태는 중국은 물론 한국에게도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¹⁶⁾

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한반도

- 오바마 행정부는 초강대국을 향해 부상 중인 중국에 대해 경쟁국이자 동반자임을 강조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견제를 의식하여 대중국 헤징전략인 아시아 회귀정책을 표명함.
 - 호주에 미군을 배치하고 중국 주위의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 군사 협력의 강화 그리고 인도와도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함. 특히 미국은 일본을 주축으로 하여 한·미·일, 미·일·호 및 미·일·인 3각 동맹을 결성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의도를 보임.
 - 오바마 정부는 대중국 헤징전략과 협력을 병행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원하는 국제질서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것임. 2013년 6월 7일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오바마와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양측 간의 일시적 합의를 도출하였음. 여기에서 오바마가 미국의 재균형전략이 중국의 봉쇄가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통한 동반자관계의 구축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가입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으나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수사적인 행태일 뿐 중국과의 군사정치적 협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을 백안시하는 태도가 나타나서 중국의 공분을 사고 있음.¹⁷⁾
-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은 강력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의 채택을 주도하였고 양자 제재까지 추가하여 시행하였음.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확장억지의 보장을 다짐하면서 한국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또한 원자력협상에서는 한국의 재처리 및 농축 허용 요구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반면 오바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MD 계획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는바 최근에 한국 군부에서 나온 킬체인인 활용도 미국의 지원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¹⁸⁾
 -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정도의 막대한 액수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긴축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대형 무기사업 수주, 한미동맹 강화, 전자권 전환문제, 북핵문제 공조 등의 양국 현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임.
 - 한미동맹이 극복해야 할 주요 핵심과제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

오바마 행정부는 초강대국을 향해 부상 중인 중국에 대해 경쟁국이자 동반자임을 강조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견제를 의식하여 대중국 헤징전략인 아시아 회귀정책을 표명함. 오바마 정부는 대중국 헤징전략과 협력을 병행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원하는 국제질서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것임

제5세대 시진핑 체제의 중국정부는 미국에게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고 있음. 신형 대국관계의 주장 배경에는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고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서 '미국이 중국의 사할적 이익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음

통제권 전환과 그에 따른 동맹지휘구조의 변환임.¹⁹⁾ 최근 한미 양국 내에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달라진 안보여건을 근거로 다시 연기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²⁰⁾

-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포기와 경제개발은 돕겠지만 핵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지난 1기 때의 오바마 정부 입장과 원칙적으로 같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속 현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어려움.²¹⁾
-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 보유를 막겠다는 의지보다는 WMD와 확산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국제 언론도 북한과 이란 간 WMD연계를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관심이 비확산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음. 우리가 이를 예방하려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라.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대한반도 정책

- 제5세대 시진핑 체제의 중국정부는 덩샤오핑이 권고한 '도광양회'를 넘어 '화평굴기'와 '유소작위'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미국에게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신형 대국관계의 주장 배경에는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고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서 '미국이 중국의 사할적 이익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음.²²⁾
- 일본 아베 정권처럼 중국 지도부 역시 내부적으로 끓어오르고 있는 중화민족주의와 대국외식에 사로잡혀 주변국과의 해양영토문제에서 쉽게 타국에게 양보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개연성은 없음. 오히려 새롭게 자각된 중화민족주의의 토대 위에서 G2로 부상한 막강한 경제력과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강화로 나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해양영토분쟁의 격화가 나타날 조짐이 있음.
-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시진핑 체제의 중국정부는 지난 후진타오정부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견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임. 즉 2012년 말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작년 초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에 대해 중국의 새 정부는 석유 공급까지 일시 차단하고 북한의 은행에 제재를 가했으며 북·중 간 세관 검열을 강화하여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정책에 중국이 무조건적으로 뒤를 봐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음.
- 물론, 중국 정부가 북한정권 붕괴를 이끌지 못할 치명적인 제재나 압박

을 가할 개연성은 없음.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중국이 미국의 동맹·연합국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포위되고 압박받고 있는 형세이므로 중국의 대북제재가 보다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려면 미국의 대중 정책 기조가 포위와 압박으로부터 공존·공영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²³⁾

- 향후 중국은 북한에게 핵 실험 등 추가 도발 감행 시 중국이 비호해 주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거나 경고하는 한편 일정 정도의 식량 및 석유를 지원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의 진척에 따라 원조와 지원을 연계할 것임.
- 작년 6월 27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핵불용이나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북한비핵화를 넘어서는 한반도전체의 비핵화를 지향하는 중국의 의도를 내비친 적이 있음.²⁴⁾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후진타오 체제보다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면서도 한반도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²⁵⁾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정책 방향²⁶⁾

- 새로운 안보전략 환경과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서도 주변국과 협력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함. 특히 북한의 대중국 예속을 억제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뿐 아니라 통일과정에서도 서로의 경제발전과 공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가.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

- 대북정책의 결정 및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변수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남-남 갈등관계 등임. 대북정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외정책적 차원에서 작동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내부적 상황, 역사적 전개과정에 기인하여 여러 가지 구조적 변수가 함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새로운 안보전략
환경과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관계를
해결하며 남북관계를
균형이 있게
발전시키면서도
주변국과 협력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함*

새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대북정책이****효과적으로 추진되기****위해서는 먼저****정책결정 및 추진에****앞서서 국제적,****지정학적, 이념적****개입요소를 고려해서****정책추진의 구조와****인프라를 잘 구축하여****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북정책의 추진을 후륜구동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대북정책의 추동력을 주는 자동차 뒷바퀴의 역할로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영향을 미치며 자동차의 방향을 제어하는 앞바퀴의 역할로서 남-남 갈등 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²⁷⁾
 - 궁극적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데 4가지 바퀴 즉,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상호작용하여 대북정책의 추동력을 주지만, 또한 북-미관계와 남-남관계가 대북정책 방향타의 역할을 하면서 좌 또는 우로 나가게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함.²⁸⁾
 - 지난 진보좌파와 정권기간 동안에 이념적 보혁관계에서 진보적 성향이 우세하여 좌파성향의 온건한 대북포용정책이 나왔지만, 그러한 좌파 온건정책의 추진이 미국의 보수우파정권 집권 이후 북-미관계의 단절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추동력을 잃었음.²⁹⁾ 반면에 보수우파적인 성향의 이명박 정부 집권으로 인해 대북정책이 다시 강경압박으로 선회하였는바 남북관계의 교착 및 경직으로 대북정책이 추동력을 잃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지 못함.
 - 마지막으로 남-남 갈등문제 또한 민주화과정 이후 진행된 이념적 스펙트럼의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한국사회 내 보혁갈등의 해소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자신의 대북정책기조를 한쪽 방향으로 유지하거나 꾸준히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움.
- 향후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결정 및 추진에 앞서서 국제적, 지정학적, 이념적 개입요소를 고려해서 정책추진의 구조와 인프라를 잘 구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인 대북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에 따른 대북정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는 한편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 및 한국사회의 내부상황 변화가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함.³⁰⁾ 아울러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에 연계시켜 나온 맞춤형 대북정책이라도 추진하기 전에 미리 대북정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사전 구도정리 및 정책공조 시스템 확립-사전 정지 작업을 통하여 개입변수를 치밀하게 통제해나가야 함. 그런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로 남남 간 갈등해소를 위한 초당적 대북정책제도 및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북한핵문제는 미해결로 지속되어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 북-미관계에 계속 장애요인으로서 발목을 잡으면서 대북정책의 추진은 물론 한반도긴장고조 및 동북아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마련해야함.

- 대외적으로도 대북정책 기조는 무엇보다 ‘국제협력(즉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있는바 이는 사실 대북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있어서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임.
 - 북한이 의도하는 북-미 직접협상이나 빅딜의 성사 자체가 현재의 북한핵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체제의 붕괴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협상, 중국의 대북경제지원, 남한의 식량지원, 북일협상 모든 것이 함께 상호 조율되고 조정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³¹⁾
 - 한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중동맹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조성과 동북아 안보불안, 미국의 한반도 및 남지나해 영향력 확대, 한국의 핵억지력 개발시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폐기와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할 필요가 있음.³²⁾
 - 지나치게 친미적이며 대미의존적인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지 말고 중국의 중재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중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넘어서는 한-중 간 안보협력 및 전략대화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³³⁾ 여기에 한국도 미국이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포괄동맹, 전 지구적 가치동맹화’ 하려는 전략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함.

- 한국의 새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연성보다는 원칙에 무게를 두고 대북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음.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도는 타 분야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과 대북정책 추진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먼저 남북관계개선과 관련해서 북한의 “중대한 제의나 대담한 제안”에 수동적/방어적 입장만 취하고 있을 뿐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발상은 보이지 않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만을 강조할 뿐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해법의 모색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임.
 - 향후 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는 엄격한 상호주의 정책을 북한에게 요구할 때, 기회주의적인 북한의 행태와 반발로 남북관계가 언제라도 다시 긴장과 대립국면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음.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향방은 첫째 양측 최고지도자의 정책판단과 의지가 중요하며, 둘째 거시적인 시각에서 대북정책의 선순환 구조와 정책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고, 셋째는 이런 모든 대내외적 상황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적 사고와 추진력이 필요함.

**대외적으로도
대북정책 기조는
무엇보다 ‘국제협력
(즉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있는바
이는 사실 대북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있어서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임**

한국의 새 정부는**남·북 간 상호 교류와****호혜적인 경험을****확장해 나가는 한편,****한반도를 넘어 중국과****러시아, 일본을****포함한 동북아****평화·번영의 비전과****구체적인 청사진을****제시하여 북한이****한반도 평화와****민족공영의 길로****나오도록 설득하고****유도해야 함**

○ 남북관계의 개선을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주변국과의 관계강화를 다시 남북관계개선으로 재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함.

○ 미중과의 균형된 공조관계에서 다각적인 대북공조체제 구축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북한의 단계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함.

○ 주요 정책결정에서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유연한 사고,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³⁴⁾

○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국민들 사이에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선제적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³⁵⁾

나.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구축 및 북핵문제의 해결
-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전략의 초석이므로 반드시 우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를 잘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문제와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함.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군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조만간 핵무기의 실전능력을 보유할 북한에 대한 확장억지를 보장받고 대량보복 능력을 확보하여 북한이 감히 한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함.³⁶⁾

○ 실용적이며 유연한 균형외교로 중국과의 국제협력강화
- 중국의 국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갈수록 커져 실효적인 대북제재,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뿐 아니라 급변사태의 원만한 수습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음. 특히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한·미동맹이 반중국 구도화로 나가는 것은 삼가해야 함.³⁷⁾

○ 적시의 대북정책 추진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이니셔티브 확보
- 한국의 새 정부는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호혜적인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번영의 비전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영의 길로 나오도록 설득하고 유도해야 함.³⁸⁾ 물론 최근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도가 타 분야보다 월등히 높지만 이것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 작동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의문³⁹⁾

- 최근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합의나 고위급회담 개최제의 등은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금의 한반도 주변정세도 또한 한국의 대북정책추진에 여러모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너무 원리원칙에 매이기보다는 적시에 맞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
- 전략적 사고와 유연한 대응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주도권 확보
 - 최근 북핵문제는 국제적인 제재아래 북한의 핵 포기만을 중용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이 마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2배로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국제사회의 무대응 속에 북한 핵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북핵문제에 새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고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에 공감하고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에 나오도록 유연한 자세와 전략적 사고로 대응할 필요
- 외교력의 한계를 직시한 외교적 자율성 극대화 방향 추진
 - 주변 국가들과의 선린외교 및 네트워크 외교의 강화
 - 북한군부의 영향력약화 및 온건파 입지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대북정책 추진
-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의 심화와 잠금쇠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한국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대중 예측심화를 방지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남·북·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남북러 가스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추진과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준비
 -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추진과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준비가 중요.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는 매우 다르며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매우 차이가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준비와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함.
 - 또한 미리 주변국들과의 공조체제 구축과 정상회담 이후의 대책까지 마련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음.

북핵문제에 새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고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에 공감하고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에 나오도록 유연한 자세와 전략적 사고로 대응할 필요

주석

- 1) 미국은 이에 따른 군사력약화 논란을 의식하여 대신에 미래전쟁에 부합하는 합동전력을 조정, 군사력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지상군 중심전투 대신에 해공군력의 증강과 함께 기동전력의 현대화, 사이버전 능력 강화, 무인기 전력의 증강으로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철호, “미국 2012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군사전략발전방향,” 「정세와 정책」, 2012년 2월호, pp.26-27.
- 2) 사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테러 전쟁에 전념하게 되면서 중동지역에 몰입,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으나 최근 대테러전쟁의 종결이 가까운 시점에서 중국의 급속한 G2 부상과 군사적 위상강화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겠다. 최우선, “미국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아시아안보,” 『주요 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2012.6.1.
- 3) 김열수(2012),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전략,” 「국가전략」, 제18권 2호, p.181.
- 4) A2/Ad 전략이란 1992년 미국이 중국의 해양전략을 주시하면서부터 사용해온 용어로서 2001년 QDR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i-access: Those actions and capabilities, usually long-range, designed to prevent an opposing force from entering an operational area. Area-denial: Those actions and capabilities, usually shorter range, designed not to keep an opposing force out, but to limit its freedom of action within the operational area.
- 5) 여기에서 작전접근(OA)이란 “임무를 달성하기위하여 충분한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작전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또한 합동작전접근이란 “확실접근(Assured Access)을 위하여 합동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DOD, 2012). 반면에 확실접근(assured access)이란 “전 지구적 공동영역이나 주권 영토, 영해 및 영공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국가적 사용”을 지칭한다. Martin Dempsey, 미 합참의장,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2012.1.17.
- 6) 김열수(2012), pp.183-187.
- 7) 위의 글.
- 8) 이 공해전투의 3가지 핵심요소는 첫째, A2AD의 도전을 제기하여 공식적인 협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직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둘째는 능력이 군 부대간에 적절히 통합되어 운영되어지도록 개념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셋째는 군사교리상의 것으로서 조직, 훈련, 지휘력, 교육, 시설상의 여러 요소들이 적절하게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합동 개발되어 효율적인 획득전략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열수(2012), pp.183-187 참조.
- 9) 최우선(2012), “미국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아시아안보,” 『주요 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pp.7-14.
- 10) 허태회(2013),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와 국가정보,” 「국가정보연구」, 2013년 제6권 1호, 국가정보학회, pp.57-64.
- 11) 허태회(2013), pp.57-64.
- 12) 조선일보, 2012년 11월 14일.

- 13) 허태희(2013), 위의 글.
- 14) 세계일보, 2013년 11월 13일.
- 15) 세계일보, 2013년 8월 4일.
- 16) 최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북한지역도 우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히면서 역사문제를 갖고 있는 일본이 새로운 정책변경에 앞서서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일침을 놓은 적이 있다. 세계일보, 2013년 11월 7일.
- 17) 당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북핵문제가 미중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핵심사안 중 하나이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목표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물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적시하기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핵문제를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동북아 안보와 관련하여서는 조어도(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더 이상 고조되어서는 안 되며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과 신형 대국관계를 강조하면서 부강한 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행복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18) 이상현, “한반도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국가전략」, 2013년 제19권 2호, 세종연구소, pp.18-25.
- 19) 이 전작권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시절이던 2005년 10월 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가 2006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전환에 기본적으로 합의하면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되었으나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의 핵도발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명분으로 2015년 말로 재조정되었다.
- 20) 그동안 양국은 전작권전환 이행을 위하여 전환계획에 따라 전군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6개분야 35개 과업 125개 과제에 전환업무를 추진하여 이미 2010년 기준으로 65% 이상을 추진하였으며 한국합참의 기본운용능력을 검증한 결과 SCM과 MCM에서 정상추진으로 평가하는 등 성공적인 토대를 구축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상현, “한반도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국가전략」, 2013년 제19권 2호, 세종연구소.
- 21) 이상현(2013), 위의 글.
- 22) 이태환, “오바마-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2013년 7월호(통권 271호), pp.4-8.
- 23) 위의 글.
- 24) 이태환(2013), p.7.
- 25) 정철호, “2013년 중국 국방백서의 대한국전략 함의,” 「정세와 정책」, 2013년 8월호(통권 272호), pp.12-15. 세종연구소.
- 26)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 여기서 신뢰는 △남북간 신뢰, △국민적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포괄함.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 ○ 남북관계 발전, ○ 한반도 평화 정착, ○ 통일기반 구축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원칙: ○ 균형있는 접근, ○ 진화하는 대북정

- 책, ○ 국제사회와 협력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기초
 -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 추진
 -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쌓기
 - 북한의 ‘올바른’ 선택 여건 조성
 -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
 - 27) 허태회·윤영미·윤황(2009), pp.94-97.
 - 28) 위의 글.
 - 29) 위의 글.
 - 30) 위의 글.
 - 31) 위의 글, pp.93-97.
 - 32) 이태환,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평가와 전망,”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세종연구소, 2010) 참조.
 - 33) 위의 글.
 - 34) 작금의 동북아 안보상황이나 한반도 주변정세 그리고 남북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증대되고 있지만 역으로 대북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선제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나서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많이 있으며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당분간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
 - 35) 대북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통일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온건진보 성향이든 강경보수이든 모두 대북정책의 정책화구조와 국민적 합의기반의 미비로 인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남남갈등 구조의 해소 및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 도출이 대북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중요한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 36) 김영호, “한반도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안보전략: 대북억제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13년 제19권 2호, pp.46-50.
 - 37) 이상현(2013), pp.26-28.
 - 38) 문순보(2013),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2013년 전반기 평가,” 「정세와 정책」, 2013년 7월호(통권 207호), 세종연구소.
 - 39) 새 정부의 북한 개성공단 파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한 평가에서 80.6%가 대북정책 찬성. KBS. 8.3. 위의 글 참조.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열수,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전략,” 「국가전략」, 제18권 2호, 2012.

- 김영호, “미국 신 국방전략의 함의와 한국 국방정책의 과제,” 동아시아연구원 Smart Q & A 인터뷰 No.2012-03, 2012.2.24.
- _____, “한반도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안보전략: 대북억제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13년 제19권 2호, 세종연구소.
- 문순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2013년 전반기 평가,” 「정세와 정책」, 2013년 7월호(통권 207호), 세종연구소.
-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기조와 북핵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 서동주, “한-러관계 결산: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놓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3년도.
- 손병권,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북미 양자대화로의 전환,” 「국방연구」, 제52권 제1호, 2009년.
- 엄상윤,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향후 과제,” 「정세와 정책」, 2013년 8월호(통권 272호), 세종연구소.
- 오정섭, “북핵공조의 한계와 정책보완방안,” 『세종정책연구』, 2010년 제6권 2호.
- _____, “북한의 10대원칙 개정: 주요 내용과 정치적 의미,” 「정세와 정책」, 2013년 8월호(통권 272호), 세종연구소.
-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정세와 정책」, 2010년 7월호(통권 171호), 세종연구소.
- _____, “한반도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국가전략」, 2013년 제19권 2호, 세종연구소.
- 이태환, “오바마-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2013년 7월호(통권 271호), 세종연구소.
- 임을출,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 초기조건과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 전성훈, “북한비핵화와 핵우산강화를 위한 이중경로 정책,” 「국가전략」, 2010년 제16권 1호.
- 정철호, “미국의 대인도 핵용인정책과 대북핵정책변화가능성,” 「세종정책연구」, 2011년 3월호, 제7권 1호.
- _____, “미국 2012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군사전략발전방향,” 「정세와 정책」, 2012년 2월호, 통권 188호, 세종연구소.
- 최우선, “미국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아시아안보,” 『주요 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2012.6.1.
- 최재훈, “이란의 핵개발갈등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2012년 3월호, 통권 189호.
- 허태희,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와 국가정보,” 「국가정보연구」, 2013년 제6권 1호, 국가정보학회.
- 홍현익, “천안함사건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기조: 평가와 제언,” 「정세와 정책」, 2010년 7월호(통권 171호), 세종연구소.

<영문자료>

- Christopher Ford, “Stalemate and Beyond: The North Korean Nuclear Impasse and Its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20. No.2, 2011.
- Haksoon Paik, “An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on Post-Cheonan Regional Security,” Presented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ymposium. 2010.8.13. Seoul. Korea.
- Kyung-Han Lim, “Global Access VS. Access Denial: US-Chinese Naval Security Competition In the East Asian Seas,”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17-1(June 2012), pp.43-64.
- Larry Niks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Diplomacy, CRS Report, 2009.05.27.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Mapping the Global Future,” *Repor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s 2020 Project*,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Honolulu, Hawaii. 2006.
- Ralph A. Cossa, “Post-Cheonan Regional Security: Where are we now?-A US Perspective,” Presented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ymposium. 2010.8.13. Seoul. Korea.
- Scott A. Snyder, “The Cheonan Incident and its Impact on Regional Securit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8.25.

❖ 저자 약력

■ 허태희

현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겸 국제평화대학 학장. 건국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에 미국 워싱턴 주립대 정치학 석사, 덴버대학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국가정보원 전문위원 역임함. 이후 선문대 입학처장과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 동북아 역사재단 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 등을 역임함.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외교정책과 동아시아 정치 및 통일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사이버 정보전과 국가정보 개혁문제”가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낙훈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